

기금진단/한약재 중금속 및 표백제 검출 파동이후

품질규격화 근본적 대책강구 필요

대안없는 실적위주단속 문제해결에 도움안돼

최근 시중유통 한약재에서의 중금속 검출 파동은 한약재 규격화 제도에 대한 근본적 제도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규격화 제도시행의 궁극적 목표인 품질규격화 정착을 위해 정부의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치 설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보건 향상과 한약재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시행된 규격화제도는 그러나 관리규정의 미비와 관련업체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지금까지 파행을 거듭해 오다 지난 9월1일부터 514종 전 한약재로 확대 본격시행에 들어갔다. 그 와중에 불거진 한약재 중금속 파동은 일반소비자는 물론이고 생산농민, 한약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킨 것이 사실이다. IMF한파에 바닥 경기를 헤매고 있는 한약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고 이같은 불신감은 수확기를 앞둔 생산농민들에게도 치명타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한약재 중에는 규격품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규격품'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품질규격을 담보로 하지 않은 포장규격화의 허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됐다. 따라서 관련업체에서는 약사법 기준이 아닌 한약재 특성에 맞는 별도의 한약법에 의한 관리규정이 만들어지고 그 기준에 의거 재배과정에서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관성있게 지도관리할 독립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약재 부문에 전문성이 없는 식의약품에서 한약규격화 정착을 통한 품질관리를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이번 발표내용만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맡은 담당기관에서 행한 조치로는 너무 대책없고 무책임한 한탕주의적 폭로라는 지적이 많다.

식약청은 서울경동시장과 대구약령시등 5대 도시 한약재 판매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갈근 황기등 한약재 17종 52개 품목을 수거, 검사한 결과 7종 32개 품목에서 인체에 해로운 표백제



및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이들 문제한약재를 전량 폐기토록 하고 적발된 13개 한약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해당 시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중금속 잔류농약 표백제등 검사대상 한약재를 현행 95종에서 위해물질 오염우려가 있는 모든 한약재로 확대키로 하는 한편 한방병의원 또는 한약판매업소등에서 사용 또는 보관중인 한약재 가운데 갈근 황기등 위해물질 함유 우려가 있는 8종의 한약재를 수거해 검사를 실시하는등 감시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관계자들은 "근본적 대안 없는 상황에서 실적위주의 폭로와 단속이 얼마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식약청에서 발표한 중금속량은 어디까지나 총중금속량이지 개별중금속들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보리콩 채소등에도 중금속은 함유돼 있다. 또 중금속이라고 다 나쁜 것만도 아니다. 납 수은 카드뮴처럼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있는가 하면 철 구리 아연 코발트 망간 크롬 주석등 동식물에 필요한 중금속도 있다. 따라서 중요한건 총중금속량이 아니라 총중금속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중금속의 종류와 함유량이다. 그럼에도 대한약전에는 중금속 개념을 '산성에서 황화나트륨 시액에 의해 정색하는 금속성혼재물'로 정의하고 그 양을 납(pb)의 양으로 나타내고 있다. 개별 중금속에

대한 시험기준치 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개별 중금속량을 무시한 채 총중금속량(30ppm)만을 문제삼을 경우 상당한 오류를 범할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금속기준치 설정은 보다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토의 산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토양 중금속오염으로부터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것이 국내 농촌현실이고 보면 중금속

한약재 품질관리 및 불법유통방지를 위한 관계부처회의가 지난달 17일 복지부 한방정책관 주재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부 채소특작과 임현언 사무관, 식의약품 의약품관리과 주광수 사무관, 광병태 사무관, 관세청 조사과장 윤석기, 농진청 작물시험장 박춘근 연구사, 복지부 한의약담당관 김용호 과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회의내용중 각 부처별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 수입한약재의 통관전 검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제조업소, 수입업소 및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 국내재배 한약재의 의약품으로서의 공급경로를 명확히 하기위해 품질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이 가능토록 하는 등 근본적 문제해결이 필요함.
 - 한약재 규격품 유통제도의 정착을 위한 약사감시를

검출문제를 생산농민과 업계에만 떠넘기는 것은 역시 무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단속에 앞서 근본적 원인분석과 합리적인 기준설정이 필요하다는 것.

표백제검출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 생산농민은 "현재 산지에서는 작약 길경등의 약재 80% 이상을 연탄건조 방식으로 작업해 오고 있는데 연탄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가 표백성분으로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얼마전 WHO 공식발표 자료에 따르면 생선과 육류 과실류등 대부분의 식품원료에서 포르말린이 자연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렇다면 작약등의 약재에도 표백성분이 자연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현실을 충분히 감안한 원인분석과 표백제의 인위첨가 여

부를 판단 합리적인 규격설정이 필요할 것이란 지적이다.

최근의 한약재 중금속 검출 파동은 생산과 유통이 이원관리되고 있는 반쪽 보건행정적 자화상일수 있다는 점에서 생약재배과정과 유통까지를 전담할 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보다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는지 모른다. 동일품목의 한약재가 농산물과 의약품으로 생산과 유통이 구분 관리되고 있는 현실에선 한약재 품질제도와 규격화제도 정착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계전문가들은 "생약재 배를 하기 전에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재배과정에서도 사용가능한 농약과 사용해서는 안되는 농약 그리고 사용량과 시기등에 대한 품목별 적용약제와 기준을 설정하고 지도 관리하는 데서부터 한약재 품질관리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한약재 품질관리와 규격화제도 정착은 단속만이 최우선이 될 수 없음을 그 이전에 오염경로와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현실적인 기준치 설정과 대안마련이 근본적 문제해결의 열쇠라는데 업계관계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문정희>

한약재 품질관리및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회의

- 실시중이며 농민, 한의사등 한약취급관련자들은 모두 규격품 유통제도에 동참 필요.
- 한약판매업소의 한약재 원산지 표시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일원화되도록 농림부에 협조 요청.

[농림부]

- 한약재 원산지 표시단속은 소비자보호 및 원산지 표시제정착을 위해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이종관리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 한약재의 검사결과를 계속 발표하는 것에 대해 재고하는 것이 필요.
- 표시된 원산지의 사실성 여부, 표백제 사용자의 명확한 규명 필요.
- 한약재배 농민에 대해 표백제 사용금지 협조 요청

[관세청]

- 한약재 밀수에 대한 단속은 금년 8월말 현재 약 72억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165%
- 식품용으로 수입하여 한약재로 불법 전용하는 사

- 례가 많음.
- 수입한약재에 대한 검사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
-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엄격한 단속은 곤란함.
- 여행자의 휴대품반입은 소량씩 이루어지며, 휴대품반입에 의한 손실보다 여행자 출국시 국내 물품 반출에 의한 이익이 크므로 국익에 부합됨.
- 유통한약재에 대한 원산지 단속시 원산지를 정확하게 감별 할 수 있는 인력 지원 요망

[농촌진흥청]

- 작물별 중금속 분석결과 한약재와 일반농산물간 큰 차이 없음
- 한약재 수거검사는 농가 생산 한약재, 건조한약재, 시중 유통한약재 등에 대한 단계별 검사를 통해 유해물질 오염경로를 추적하는 것이 필요.
- 표백제 사용은 갈근, 백작약등 일부 품목에 한정되므로 문제품목에 대해 건조과정등을 특별관리하면 해결 가능